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브리콜

경제의 눈

문화향기

설 명절 재래시장 가는 즐거움



정 대 영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고객이 찾지 않는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색을 살려 대형마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전통이 살아있는 특화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나는 가끔 재래시장을 찾는다. 재래시장에는 사람사는 재미가 있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도 상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있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으며 쾌적한 분위기이지만 어쩐지 상품진열장 같은 느낌이 든다. 대형마트는 상품 앞에서 고객을 바라보는 느낌과 눈과 눈의 교감을 느끼는 2차원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재래시장은 퍼드러지게 늘어놓은 물건들과 나 사이에 접포 주인이 있는 3차원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래시장은 값을 깎을 수 있고 물건을 담으려고 더 받을 수도 있으며 단골이 되면 여러가지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정이 있는 곳이다. 나는 어떤 때는 물건과는 아줌마의 눈을 쳐다보지 못할 때도 있다. 차가운 바다에 앉아 얼마되지 않는 물건을 넣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물건 사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눈빛을 마주치게 되면 꼭 사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 같은 것이 생김이 싫어서이다.

‘인간’이 있는 3차원 공간

2006년 5월 현재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1천 660개(광주24개, 전남도137개)가 있으며 점포수 24만개(광주3천686개, 전남 1만56개)에 상인 39만명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주변식당·원자재·포장용기 납품업체 등 수

많은 관련 자영업자가 연결되어있는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의 실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이 1980년대부터 나타난 기업형 편의점으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의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는 농수산물, 공산품, 생활필수품의 다양한 중저가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이점을 살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넓은 주차공간, 고객여인의 전문적인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고 있으나 반대로 재래시장은 갈수록 찾는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인해 재래시장 상인들의 절망감과 소외감은 점점 더해지고 있으며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상인들이 많이 있다.

특히 2000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이 인터넷 이용 고객을 기반으로 급속히 세력을 넓혀 나가면서 재래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거인들의 공격을 받아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한해에만 재래시장의 평균매출이 2004년도에 비해 8.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고사해가는 재래시장의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04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6년 5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경영혁신, 시장관

리 선진화, 시설 현대화, 상권활성화의 4대 정책 과제에 3년간 4,678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도 매년 재래시장 몇 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화된 시장으로 바뀌어야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에 이미 과잉 공급되어 있고 주변 소영세상가와 재래시장을 초도화시키는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재래시장 상인들도 주인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화해서 자생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고객이 찾지 않는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각각의 특색을 살려 대형마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전통이 살아있는 특화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우리 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들여 있고 정이 넘치는 재래시장이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한번씩 찾아가 장사가 안되어 시름과 걱정에 젖어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명절때만이라도 환한 미소를 찾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현실 또 외면한 ‘1·31’ 부동산 대책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지방현실에 맞지 않아 실망스럽다. ‘1·31’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장기 임대주택 260만 호를 공공 부문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요억제 정책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의 무게 중심이 규제 강화에서 공급 확대로 옮겨진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수도권에 맞춰져 있다 보니 지방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광주·전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이미 1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추세에 외곽지역 임대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

하겠는가. 지방은 임대주택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평수와 위치 등 질적으로 개선된 주거 복지가 더욱 절실하다.

공공 임대주택의 무분별한 공급이 지방 민간부문에 주택 건설업을 더욱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동안 수도권을 겨냥한 규제강화 정책이 지방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지방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방 민간 시장은 공공 얼어붙도록 만들어 놓고 시장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정부가 나서 마구잡이로 공급부터 늘린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1·31’ 대책은 막대한 재정부담, 택지 확보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전념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대책을 지방과 수도권은 달리해야 할 것이다.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중단 당연하다

광주시가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본방침은 이미 확정됐지만 지난달 31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및 빛고을사랑운동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불법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지난 2000년 시행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다. 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폭력 시위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 공익을 해치고 민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불법·폭력시위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난 2005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1천36건의 집회 및 시위를 불법·폭력으로 간주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3천190억원이라는 계산

까지 나왔다. 실사 모두 합적이라 해도 6조9천671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불법·폭력시위는 국가나 지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된다. 특히 광주는 민주와 인권의 도시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까지 과격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격 이미지 각인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게 수밖에 없다.

문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다. 경찰청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보조금 지원 중단 단체를 가려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자칫 건전한 시민운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단체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주고 공개적인 심의과정 등을 거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근본 취지는 불법시위 근절이다.

無 等 鼓

지난 1951년, 한국은행은 부산에 거주하는 60가구의 생활 수준을 조사했다. 한국전쟁 중 국민의 경제상태 및 소비수준을 측정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조사 우리나라 가계조사(家計調査)의 시초다.

현재 가계조사 비용(費目)은 주거, 광열·수도, 가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등 10가지로 8천800 가구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4%가 “통신요금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생활비의 20% 이상을 통신비에 쓴다는 답변도 5.6%나 됐다.

가정주부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료 문제로 자녀와 자충일수록 가계 지출 중 음식물 값이 증대한다는 ‘엔겔법칙’(Engel’s Law)을 정립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됐다. 지난 1963년 55.1%였던 식료품비 비율은 1975년 48.8%, 1985년 36.8%, 1997년 28.7%, 2005년 26.4%로 떨어졌다. 국민 소득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되

었음을 반증하는 변화상이다.

옛그때 통계청은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325만1천원이며, 지출은 254만3천원이었다고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통신비 비중이 6.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10년 전인 1995년 2.1%에 비해 4.3%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대전 주부교실’이 시민 9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4%가 “통신요금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생활비의 20% 이상을 통신비에 쓴다는 답변도 5.6%나 됐다.

가정주부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료 문제로 자녀와 자충일수록 가계 지출 중 음식물 값이 증대한다는 ‘엔겔법칙’(Engel’s Law)을 정립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됐다. 지난 1963년 55.1%였던 식료품비 비율은 1975년 48.8%, 1985년 36.8%, 1997년 28.7%, 2005년 26.4%로 떨어졌다. 국민 소득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되

였음을 반증하는 변화상이다.

옛그때 통계청은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325만1천원이며, 지출은 254만3천원이었다고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통신비 비중이 6.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10년 전인 1995년 2.1%에 비해 4.3%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대전 주부교실’이 시민 9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4%가 “통신요금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생활비의 20% 이상을 통신비에 쓴다는 답변도 5.6%나 됐다.

가정주부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료 문제로 자녀와 자충일수록 가계 지출 중 음식물 값이 증대한다는 ‘엔겔법칙’(Engel’s Law)을 정립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됐다. 지난 1963년 55.1%였던 식료품비 비율은 1975년 48.8%, 1985년 36.8%, 1997년 28.7%, 2005년 26.4%로 떨어졌다. 국민 소득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되

였음을 반증하는 변화상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박 영 웅. 최근 주부 박모(45)씨가 병원을 찾았다. 상담을 시작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박씨는 20여 분이 지난 뒤에야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살을 빼려 헬스클럽을 갔는데, 러닝머신 위에서 달린 지 얼마 안 돼, 소변이 조금씩 새는 것이다. 아이를 돌 보던 난 뒤 조금씩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니, 갈수록 심해졌다고 했다. 박씨는 “남편이나 친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도 얘기할 용기가 안 나 혼자 끔찍 앓았다”면서 “불무게

독자마당. 지역감정 부추길 우려있는 기사 자체해줄길. 얼마전 지역 모일간지 기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구었다. ‘전라리언·쟁쟁이, 전라도 비하 ‘악플’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로서 광주·전남지역이 악플러(악의적으로 댓글을 다는 네티즌)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전라도 관련 악플에 과민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며, 인터넷 예절인 ‘네티켓’을 공교육과 인본 등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조언한다. 그러나 나는 이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도 나온 의견이지만 이러한 기사 자체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즉 손이 근질근질한 악플러들에게 좋은 소재거리를 주어 전라도에 대한 온갖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게 만든다. 전라도에 대해 아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악플을 통해 양산되고 조장된 일련의 사건들, 역사적 사실들(그것들이 사실이든 아니든)을 통해서 우리지역과 지역민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갖게 한다. 지역인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기사라 하더라도 그 의도가 인터넷상에서 오도되고 변질되는 상황이므로 ‘지역감정’ 또는 ‘지역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사는 자체해줄길 한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여과없이 기사화하여 ‘뉴스질’ 하고싶은 유훬도 단호히 물리치기를 바란다. 그러한 부정적 기사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지역과 지역민들을 만인의 공격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방식대로 살더라도 외지에 가서는 타지역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우리’를 너무 강조하거나 드러내지 말자. 서울에서 애항심의 발로에서 “해태”와 “금호”를 외치는 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지역을 사랑하는 것도 전라적으로 머리를 썩여 할 때이다. ▲김정훈·광주시 남구 송하동

일반 항공우편 배달 왜 배송책임 안지나. 얼마 전 일본에 있는 동생에게 자그마한 소포를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문의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 보내는 방법을 묻자 우체국 담당직원은 “항공배달과 선박배달이 있다”며 “항공배달은 다소 비싸지만 빠르고 선박배달은 도착기간이 늦다”고 설명했다. 일본까지 항공배달은 2kg짜리가 1만5천 800원, 선박은 1만원이어서 배가 싸지는 했지만 선박 배송은 저렴한 만큼, 배송기간이 적어도 한달, 길면 두달 이상도 소요되고 송장도 발부할 수 없고 배송 도중 분실과 파손 등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기 힘들다는 뜻이었다. 이 말을 듣고 누가 선박으로 소포를 보낼

오토바이 뒷자리 어린이 태우는 것은 위험. 시장을 다녀오다 오토바이 한 대에 운전자와 매미처럼 붙어있는 어린이가 타고 있는 것을 봤다. 운전자와 아이를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불안한 모습에 한참을 지켜보는데 신호를 받은 오토바이가 커브길을 돌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렸고, 뒤따르던 택시 운전사가 깜짝 놀란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정거를 했다. 뒤에 탔던 어린이가 떨어지길래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어린이들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는 것만으로도 떨어질 위험이 크니 삼가해야 한다. 굴곡이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저속으로 운전하는 것은 기본이다. 마치 못해 태울 때에도 가끔씩 안전 장구를 챙겨야 한다. ▲김진순·광주시 광산구 심거동

어린이 통학버스 법정 안전 기준 준수해야. 며칠전 아파트앞을 지나다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하차하는 광경을 봤는데, 조그마한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수가 너무도 많았다. 요즘 박물관 방문 등 외부 견학을 갈 때 유치원생 거의 모두를 통학버스 한 대에 태우고 간다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들이 규정되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되고자 하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거의 모든 가정의 유아원 및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모두 안전기준을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다. ▲최형진·진주경찰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77) 조 사 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